東北亞 경제권의 展開와 통일 課題

金 成 勳*

목 차

Ⅰ. 서론: 국제정세 변화 속의 한민족, 한반도
Ⅱ. 3강평원 개발과 동북아 경제 진출
Ⅲ. 두만강 개발사업: 또하나의 동북아 협력의 시금석
Ⅳ. 北韓의 對外경제 개방 전략
Ⅴ. 東北亞경제권과 한반도 통일 전망

Ⅰ. 서론 : 국제정세 변화 속의 한민족, 한반도

바야흐로 국제경제질서는 전후세계를 풍미하던 미·소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다극체제의 지역경제권 중심으로 재편의 기운에 휩싸여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에서 유럽경제공동체(EC)가 유럽자유무역연맹(EFTA)과 통합해 유럽연합(EU)으로 확대됐고, 그와 동시에 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대연합(EEA)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 카나다, 멕시코, 즉 AMEXICANA로 합성된 북미대륙의 경제통합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탄생했는가 하면, 동남아시아 ASEAN 국가들에 의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창립됐다. 나아가서 미국 주도에 의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활성화 움직임에 맞서 말레이지아 총리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이 제안되고 있다.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라는 잠자던 사자가 기지개

* 중앙대 교수, 동북아연구소장

를 켜고, 대만, 홍콩, 동남아를 포괄하는 대중화권(大中華圈), 즉 화남경제권이 생동하고 있다. 일본은 욱일승천하는 경제력을 배경삼아 동남아시아에 이어 동북아시아에서의 종주권 행사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제 20세기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 대립은 사라지고 그 대신 지역주의와 경제패권주의가 그것도 강대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국리민복을 앞세운 경제주의와 지역블럭화는 이제까지의 원교근공(遠交近攻) 책략 대신에 국익차원에서 원교근린책(遠交近隣策)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과거의 적대국이었던 강대국끼리 짝짓기를 서슴치 않고 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약 7천5백만명의 한민족(조선족)이 두개의 국가와 하나의 자치정부를 가지고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있다. 남한의 4천5백만, 북한의 2천5백만, 미국, 일본 등 서방세계에 2백5십만, 그리고 북방권에 약 2백5십만명이나 펼쳐 있다.

20세기말을 바라보며 정치경제의 대지각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까지 꽁꽁 언 땅이나 다를 바 없던 북방대륙이 열린 것은 대단히 큰 변화이다. 만주, 시베리아, 연해주, 몽고 그리고 한반도 북녘땅이 바야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활동무대로 다시금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옛땅, 조상들의 혼과 겨레의 얼이 깃든 곳, 지금도 2백5십만의 동포가 한 언어, 한 문화 풍습을 영위하며 조선민족(韓民族)임을 자랑스럽게 번성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의 북방경영사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시대 이후 위축일로의 참담한 것이었다. 고려조 묘청의 좌절된 북방경영사(北方經營史), 공민왕 때의 한이 맺힌 위화도 회군, 조선조 효종 때의 미완의 북벌정책, 그리고 나라 잃은 선조들이 피를 뿌리며 개척했던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 벌판. 북풍한설을 무릅쓰고 일구어낸 북방세계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다시금 우리 겨레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을 정점으로 맞닿아 있는 만주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과 시베리아 연해주 지방(러시아의 遠東지역)은 고구려, 발해의 고토이었으며 아직도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천연자원이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우리 후손을 위해 아껴놓은 개척의 땅일지도 모른다. 지구상에 5천년동안 한 핏줄, 한 언어, 한 문화를 유지해 온 7천5백만의 한민족이 서로 만나고 있는 접점이 바로 이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베리아와 만주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자원개발 차원만이 아니라 바로 문화경제적으로 민족사를 복원하는 길이다.

지금으로서는 황해와 동해 연안의 6국 6지방을 한데 묶는 「동북아 경제권」 구도는 비록 그 실현에 있어 많은 시간과 공력이 소요될 원대한 구상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아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중심으로 떠오르고 그로 인해 오래 막혔던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어 통일의 기반을 새로이 다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현재와 미래의 동북아경영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며 그와 수륙으로 맞댄 중국과 러시아이다. 경제적으로도 교류와 진출의 전망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이 동북아 대륙이다. 이들 지역은 우리 선조들의 얼과 혼이 깃든 옛땅, 우리 강역이었다. 세계 각국의 영토가 확정된 오늘날 조상들의 옛 터전을 윤리적으로 되찾겠다는 것은 지나친 국수주의 논리이다. 그대신 오히려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진출하는 것이 현대문명의 추세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국경을 초월한 여러 민족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주축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과거 수천여년의 한·중 관계사를 거슬러 보면 중국대륙의 정치, 사회 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命運에 직, 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고 때로는 평화관계, 때로는 적대관계를 되풀이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할 확실한 교훈은 우리 이웃나라들의 국력이 강성했을 때는 언제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日本이 세계 제2의 경제강국으로 떠오른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더욱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 추세에 따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다시 만남이 장차 「잠자는 백설공주와의 해후」가 될지 또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지 지금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오늘날 세계 문명발달사는 한나라의 발전이 천연자원의 부존여하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기보다 인적 자원의 활용(資産化)여하에 크게 달려 있음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 자국의 발전을 위하여는 자본주의적 개발원리 마저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중국 정권은 이제 이 지역에서 주도권 행사를 위해 급격히 부상하는 일본의 경제적 패권주의를 여하히 견제하면서 그 경제력을 적절히 활용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다. 그 완충제로서 한국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 우리나라의 자본과

경제기술수준이 행여 일본에 비견되어서가 아니다. 중국의 현단계 수준으로서는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등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한국 수준의 기업 및 기술이전이 목전의 이익에 크게 부합되기 때문이다.

수교가 안된 상황하에서도 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에 한국정부를 적극 끌어들이고, 삼강평원개발, 요동반도, 산동성, 천진 및 상해 경제개발에 다투어 우리나라 기업을 초치하는 까닭도 모두 이 때문이다. 東北亞경제권 형성이 21세기의 장기과제라고 전망할 때 우선 그 小단위로서 황해연안의 공동개발은 20세기가 가기전에 성취할 수 있는 아니 당장에 남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공동과제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개발계획은 바로 중국의 동해안 개발계획과 서로 맞닿는 개념이다.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하여는 북한도 적극적이다.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남북한 쌍무적인 협력은 당분간 곤란하지만, 일단 다자간 협력에서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서로 피할 수 없는 자구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동북아경제권 또는 황해경제권 개념이 무르익어 각종 공동사업이 제안될 때 북한의 참여는 거의 확실하다. 대륙붕의 개발, 兩岸의 합작투자, 환경보전문제, 자원개발을 위한 제3국 공동진출 등에 북한이 참여할 명분과 실리가 모두 갖춰져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교류 합작이 정치성을 배제한 다자간 협력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뜻한다.

뿐만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중국의 동북3성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경제, 혈연, 국민감정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곳은 중국 역사에서는 최근까지 영원한 '關外(집 바깥)'이었지마는 우리에게는 조상의 발상지이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와 일제하 무장항일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들과 산과 강하의 구비구비가 우리 선조들의 활동무대이었다. 오늘날 북방진출을 위한 남북한의 공통과제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들 지역이다. 만주와 시베리아, 그리고 연해주 대륙의 경제적 잠재력은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하여 탁월하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경공업수준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으나 老工業區로서 그리고 자원의 부존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 그

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협력 여지가 더 크게 열려 있는 곳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태부족인 각종 자연자원이 주로 이곳에 집중하다시피 잠재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서울과의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 인접해 있다. 비행기로는 한시간권, 수륙교통으로도 하루권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그곳에선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손짓해 부르고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시대의 잔재가 서로간에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실질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일제하 이곳을 13년간이나 강점했던 일본과 다시 한번 경쟁해야 할 곳이 바로 동북3성인 것이다. 역사적 정서적 가치관단에 앞서서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로 크게 떠오르는 지역이다. 그런데 1988년 한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된 이후 그곳을 찾는 우리나라 방문객의 발길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실질적인 경제합작은 기대수준의 훨씬 이하이다. 그 주된 이유는 아직도 서로의 체제와 협력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하고 정부의 지원체계가 미흡한 데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곳의 낮은 수준의 사회간접자본과 행정체제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개방 이래 중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면의 변화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눈부시다. 머뭇거리다가는 자칫 기회가 지나가 버릴 정도이다. 특히 만주 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백두산을 경계로 하여 북한과 광범위하게 인접해 있어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남북한 통일에 커다란 지렛대 역할까지 맡고 있다. 그런데 바야흐로 한반도는 정치이념의 차이를 빼놓고 본다면 이제 세계의 외진 곳이 아닌 태평양시대의 중심지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추세에 따라 이 지역에 동북아 경제협력권 구도가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의 산동, 북경, 천진, 요동반도와 우리나라(남북한), 동해를 사이에 둔 길림성, 흑룡강성,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이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데 어울려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까지 유럽권에 속해 있던 구 소련의 遠東지역과 구 소련권에 속했던 몽골이 모두 동북아시아 경제권에 자진 참여할 태세이다.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중핵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서의 만남도 이곳

에서 치열해질 가능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연해주와 황해 連雲港으로부터 각기 출발하는 유럽행 철도는 당장 우리나라의 유럽진출에 대륙교의 구실을 해주고 있다. 두만강 하구의 3각주 개발 전망 역시 다자간 형태로 남·북한이 함께 협력할 좋은 시험무대이다. 시베리아 및 만주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력방식의 만남과정에서 남·북한간에 신뢰가 축적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쌍무적 협력과 경제통합이 촉진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韓民族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세계 정세변화 속에서 한민족이 다시 세계사에 우뚝 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Ⅱ. 3강평원 개발과 동북아 경제 진출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이념의 장벽, 정치, 군사, 외교의 장벽에 가로막혀 '영원한 冰土'였던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 대륙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하루생활권 안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믿기지 않을 변화가 지난 10년 사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붉은색 푸른색으로 표시되던 지구촌의 지도마저 대부분 단색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발상지였으며 활동무대였던 동북아대륙 역시 이데올로기의 깃발이 내려지고 지금 대외개방과 경제개발의 열기가 두툼히 감돌기 시작했다. 최소한 경제적, 문화적 국경은 바야흐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동북아대륙의 변화는 눈부시다. 이미 일본의 선진화에 이어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이 바짝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한때 후진지역, 이데올로기 분쟁지역으로 분류되던 이 지역이 탈이데올로기 추세에 따라 시나브로 지구촌의 새로운 교통 경제 및 자원개발의 요충지로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옛 우리 조상들의 주된 활동무대였다. 극히 최근까지도 우리 선조들이 바로 이곳에서 나름대로 개척과 개발을 이끌어 왔었다. 지금도 250여만의 동포가 이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비록 국적을 달리하고 있을 지언정 한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 우리 말, 우리 글, 그리고 상부상조의 동포애를 고이 간직하며 살고 있다. 분단의 세월은 어언 반세기를 흘렀으나, 이렇듯 민족의 동질성은 의연한 것이다.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명제는 이제 더 이상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새 중국의 北大倉(북쪽의 대 곡창) 삼강평원이 한국 대륙개발주식회사에 의해 열리고 두만강 하구 중·러·북한의 삼각주가 개발 열기에 휩싸여 있다. 이 두 프로젝트는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試金石이라고 불러 과언이 아니다.

1994년 7월5일, 그 3강평원이 마침내 공식으로 "안중근 농장"이라는 간판을 단다. 한·중 합작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삼강평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발해(A.D.698-926) 멸망 이후 1천여년동안 잊혀진 '옛 땅'과 '우리의 얼'이 이제 그 후손들에 의해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 천지로부터 발원한 송화강과 흥안령에서 시작한 흑룡강(아무르강), 그리고 우수리강 등 세 江이 만나면서 이루어 놓은 10만9천㎢의 광활한 대지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원의 寶庫로서 비로소 그 개발이 본격화된 것이다.

남한만한 땅 덩어리 위에 겨우 8백여만명의 인구가 2백70만ha의 논밭을 일구며 살고 있을 뿐, 당장에 개발할 수 있는 미개간지 면적만도 남한 전체 논밭 넓이인 2백11만ha에 달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1천여년의 원시삼림(3백13만ha)이 펼쳐져 있고 노루와 사슴, 말과 소가 뛰노는 목초지(28만ha)가 무한하며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호수와 늪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그 곳곳에는 금, 은, 철, 석탄, 석유와 각종 광물자원이 무진장 묻혀 있다. 이미 풍부한 임산자원과 농산물로 중국 제1의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땅이 우리의 선조들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강역이었으며, 일제하 우리 선열들이 망국의 설움을 달래며 이민하여 개척했던 곳이다. 그리하여 삼강평원 곳곳에는 항일 무장독립군의 핏자국이 어리고 서려 있으며, 지금도 그 후예들이 비록 중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몽매간에 조국을 잊지 않고 있다.

이 3강평원의 중심지역인 부금시 두흥지구(富錦市 頭林, 興隆 地區) 10만ha, 약 3억평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그중 1억14천4백만평이 '대륙종합개발주식회사'(회장 張德鎭)와 중국 '흑룡강성 농업개발건설 총공사 (陳永寧 총경리)가 1차 합작기간 40년, 양측 합의하에 최장 1백20년간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기로 1992년1월31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먼저 94-96년에 걸쳐 3만8천ha(약 1억1천4백만평)을 개발하고 잔여분은 15년간 순차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4년도 중엔 5천ha를 개간할 목표로 첫 삽질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중 3천5백ha(약 1천50만평)에 대해서는 개발과 동시에 콩 종자를 파종 하였다. 그 결과 올 10월에는 약 5천2백50M/T의 콩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대륙종합개발(주)측이 삼강평원개발에 대해 92년 1월31일의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밀조사한 타당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치: 북위 47°2″~47°5″, 동경 132°15″~132°20″
2. 면적: 38,000ha (농경지 30,330ha, 목축양어지 3,200ha, 기타 2,470ha)
3. 기상조건: 최고 37.1℃, chlwj -37.8℃, 평균 서리없는 기간 146일/1년. 10℃이상 일 적산온도 2603.6℃, 연 강우량 526.6㎜, 일조시간 2500.2시간
4. 토양: 유기물 함량 10%내외, 겨울 동토 깊이 1.5m(한국 1m)내외, 밀, 콩, 옥수수, 벼가 재배되고 있음.
5. 홍수 및 침수: 총 유역면적은 4,921㎢로 우수리강 수계에 속함, 87년 이후 2개의 홍수조절 저수지 및 신칠성하 건설로 저지대의 침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피해는 없음. 지구내 배수로와 배소장 건설 및 제방과 지류 건설시 배수개선 기대.
6. 노동력: 흑룡강성내 45만의 동포와 부금시 관내에 40만 인구 및 54개 삼강평원 기존 농장에서 전문인력 충원.
7. 시장: 정부수매, 자유시장 출하, 정부 보관창고 이용권 획득.
8. 농업자재: 省정부가 국영농장에 준한 자재공급 보장, 한국서 비료, 농약, 기자재 도입 허용.
9. 기존농장 생산성(Kg/ha): 밀 2,020-4,200Kg, 콩 1,874-2,250Kg.
10. 사회간접자본: 도로, 철도(만주 전지역과 연결), 전기, 전화 가설돼 있음.
11. 평당 총 개발비: 309.6원(국내 평당개발비는 10,590원임).

12. 예정 생산량: ① 38,000ha 완공시, 3년간 콩 7만톤, 밀 13만톤,
② 10만ha 완공시, 콩 22만5천톤, 밀 42만톤
(1990면 해외수입량: 콩 1백9만톤, 밀 2백24만톤).

13. 내부투자 수익률 추정: 30% (만약 사업비가 20% 증가하고 농업수입이 20% 감소할 경우 감응도 분석 결과는 20.5%).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객관적인 타당성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래 농업이란 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져 경영하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자칫 기상조건의 변화와 인간의 협동심과 예지의 결핍으로 인해 크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북방지대의 농업특성상 파종시기와 수확시기를 놓치거나 관개배수관리의 소홀로 다 된 농사를 하루 아침에 망쳐 놓을 수가 있다.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과학기술 영농기법의 도입과 훌륭한 지도력과 협동적 대처 뿐이다. 그리고 수확후 저장, 가공, 유통, 수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농장의 구성과 운영시 그 조직원의 인원과 지휘, 감독 체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원래 농업은 물론, 이 지역과 위치, 기상, 토양 조건이 유사한 미국 미네소타주 및 중북부의 농법과 기자재를 직접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천재지변을 아무도 막을 수 없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그 피해를 미리 막고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과학 기술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확한 농산물과 고가의 장비 및 원자재의 도난 방지에 특히 만권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88년 중·소 국경분쟁이 일차적으로 타결될 때까지만 해도 3강평원은 언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지역으로 분류돼 대외 개방과 개발이 제한되어 왔었다. 그리고 제2차 대전 이전까지 일제 괴뢰 만주국(滿洲國)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는 개발장비의 원시성과 항일무장대의 방해로 개발이 저조하였었다. 이제 범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 탈냉전 추세와 더불어 한반도와 만주를 포함한 연해주, 시베리아 일대가 개발과 개방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그 징표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하얼빈, 장춘, 심양, 연길등 대부분의 동북3성 주요도시가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러시아 극동지방 연해주의 나홋트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시베리아 주요 도시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7월부터는 UNDP 주도하에 중, 소, 북한의 국경지대인 두만강 하구 삼각주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한국과 몽골까지 참여시킨 범동북아시아 공동개발계획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 논의가 자못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볼때 삼강평원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한가운데 놓여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92년에는 연변지방 도문~훈춘간의 철로가 추가로 설치 됐고 두만강 하구를 통해 한국의 동해안과 곧바로 연결된다. 이 루트 없이도 현재 부금시→수분하→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톡 또는 자루비노 라든지 나홋트카까지 기차로 연결된다. 또는 최근에 한국선박의 입출항이 허용된 북한의 청진항까지 부금시와 철도로 연결된다. 그런다음 우리나라(속초, 동해, 부산등)로 직접 화물을 싣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시베리아 횡단철도로는 부금시-하얼빈-찌찌하루→만주리→울란바토르 노선과도 직결돼 유럽에 닿고, 또는 하얼빈→심양→대련으로 연결돼 곧장 한국의 인천, 군산, 목포로 이어 진다.

그런데 만약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면 삼강평원은 도문→남양을 거쳐 원산→평양→서울과도 맞닿는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북방대륙이 이제 우리의 2~3일 생활권에 들어선 것이다.

Ⅲ. 두만강 개발사업: 또하나의 동북아 협력의 시금석

주지하듯 두만강 개발계획은 1991년 7월 부터 UNDP 주도하에 중국 延邊의 훈춘, 러시아沿海州의 핫산지구(크라스키노, 포시에트 및 자루비노) 그리고 북한의 先鋒(雄基) 과 羅津을 잇는 두만강 하구 약 1천km^2 小삼각지구에 국제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려는 동북아 지역협력 프로젝트이다. 범위를 더 확대하면 연변 조선족자치주 수도 延吉과, 연해주 군사항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북한의 淸津을 잇는 大삼각

지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물론, 몽골, 한국, 일본의 참여하에 消동북아협력사업으로 UNDP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UNDP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범국가간 지역사업으로 메콩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바 있다. 1992년 블라디보스톡 항구 및 훈춘과 접경하고 있는 핫산지구가 개방되는 시점에 맞춰 훈춘 역시 1992년 2월 공식적으로 중국 國務院에 의해 대외적으로 개방되었다. 북한은 역시 뒤질세라 1991년 12월 나진, 선봉 지역을 「자유무역경제지구」로 선포하고 대외적으로 개방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2년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8일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민간전문가들을 북한에 초청하여 현지에서 동북아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1992년 10월엔 최고인민상설회의에서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1993년초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잇달아 외환법, 은행법등 부속법률이 도합 20여개나 제정 공포되었다.

두만강 하구 삼각주 개발 계획을 제일 먼저 구상하여 추진한 바 있는 중국 길림성 정부는 훈춘시의 개방 이전인 1991년도중에 이미 두차례에 걸쳐 훈춘의 防川으로부터 두만강 하구 東海까지의15km를 항해실험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문자 그대로 '一望三國', 즉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훈춘으로부터 두만강 뱃길로 연해주 포시에트항구까지는 약 40여km, 블라디보스톡이 160km, 선봉항은 38km, 나진항이 90여km에 불과하다.

다른한편, 훈춘의 남쪽 경계지역인 沙陀子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샛별시(아오지 탄광이 있는 옛 경성지방)와 2백여m도 채 안되는 강다리로 연결되어 이른바 중국-북한간의 변경무역의 창구역할을 해오며 서로간에 왕래하고 있다. 훈춘으로부터 육로로 웅기(현 선봉)까지는 40여km도 채 안되는 指呼之間이며 나진은 93km, 청진은 171km에 불과하다. 그리고 두만강 하구의 러시아쪽 핫산과 북한쪽의 豆滿江里간에는 현재 철도가 연결되어 서로간에 하루 두번씩 블라디보스톡과 나진, 청진으로 연결된다. 이는 두만강 中流 중국쪽의 圖們과 북한쪽의 南陽 사이의 기존 철도가 회령을 거쳐 결국 나진에서 서로 만남을 뜻한다. 日露전쟁전까지는 훈춘에서 샛별시(옛 경성)사이에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었는데 帝政러시아가 패

전과 동시에 철수하면서 뜯어가 버렸다. 그 잔해가 아직 남아 있고 교각도 그런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중국측이 이 철도의 복구를 십수년째 북한측에 요구하여 왔었다. 이처럼 훈춘은 陸路, 鐵路, 海路를 통해 3국의 중심적인 기능을 부여 받고 있다.

그런데 1938년 張鼓峰사건 이후 일본군에 의해, 그리고 그후 帝政러시아에 의해 중국은 훈춘으로부터 동해까지의 出海의 길이 막힌 것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으로서는 傷만주지역인 동북3성의 동해 및 태평양에로의 진출은 꿈에도 소원하는 숙원이었다. 훈춘 (방천)으로부터 두만강을 따라 약 15km만 더 내려가면 동해에 이르는데 그 길이 반세기가 넘도록 막혀 왔던 것이다. 이를 다시 트자는 것이 UNDP의 두만강 하구 개발계획인 것이다.

이 물길은 고구려와 발해가 만주벌을 호령할 때 일본(倭)과 신라에 이르던 이른바 「東海道」로서 옛부터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루트였다. 중국이 등소평 정권의 등장이래 개방, 개혁 정책을 표방하면서 東北3省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두만강 하구의 출해권을 다시 회복하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 안간힘을 다 해온 것은 하등 이상하지 않다. 그 첫번째 시도가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는 UNDP 두만강개발계획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중국측이 UNDP 두만강 개발 계획을 대외 홍보용 깃발로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중국-러시아, 중국-북한간의 쌍무적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992년 12월19일 UNDP와 관계없이 양상곤 중국 주석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간에 「東北亞 운수문제 해결」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중·러 간에 UNDP 개발계획 지구와의 쌍무적 철도부설 및 항구건설에 관한 협정서가 체결되고 「中·러 合環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시간이 오래걸린 UNDP계획의 실천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핑계로 경제적으로 쇠약해진 러시아를 우선 설득하여 훈춘-크라스키노 철도부설권과 자루비노 항구 사용권을 획득한 것이다. 나아가서 1993년 3월 북한마저 설득하여 중-북한간의 훈춘-선봉을 연결하는 철도복원계획을 발표하였다. 94년부터선 북한의 청진동항(東港)을 중국측에 사용할 권한을 약속하였다. 이협정에는 한국 국적선도 중국과의 화물을 적재한 이상 입출항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고 실제 94년 3월 그것이 실현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용정 삼합(三合)과 맞닿은 북한의 회령과 나진간의 도로가 확장 보수되고 앞서 말한 훈춘-샛별시간의 철도가 선봉, 나진, 청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연변(훈춘)과 연해주(크라스키노)의 접경지역인 훈춘 長嶺子에는 이제 현대식 중국邊境貿易海關(세관)건물이 완성됐고 1994년 말이면 훈춘과 크라스키노를 연결하는 山岸철도가 준공된다. 이미 중국은 북경에 이어지는 만주철도의 종착역인 도문으로부터 훈춘까지의 65여km에 달하는 새로운 철도(도훈철도)를 완성하여 이를 크라스키노까지 32km를 연장하는 中·러 철로건설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늦어도 1994년 6월까지는 이 中·露 山岸철도의 연장선끝에 있는 자루비노 항구는 중국과 일본등 국제자본의 투자에 따라 연간 3백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약 3억5천만달러의 자금중 이미 5천만달러는 일본 東北地경제위원회가,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약 6억엔의 상업차관을 약속 받았다. 홍콩 기업 역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 범안(泛安)그룹과 길림성 정부가 합작으로 길항공정(吉港工程)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중국 동북지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훈춘-크라스키노에서 새로이 연결될 전망이다. 이 철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포시에트항구와 자루비노항구 그리고 훈춘에 연결되는 청진항을 중국측이 개발할 경우 좁게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한국의 동해안 항구와 일본의 서북해안 항구, 그리고 미국, 카나다 등 太平洋국가로 연결되고, 넓게는 유럽대륙과 태평양국가들이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육로로 서로 만나게 된다.

이같은 中國(길림성)·러시아(연해주)간의 협정은 1992년 10월11일 北京에서 개최된 제2차 두만강 계획 정부대표간 운영위원회(PMC)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때까지 주장해 오던 관계국 정부가 자기 영토안의 개발지구를 獨自的으로 개발하자는 案을 포기케하고 그 대신 중국측 案이나 다름없던 각국이 계획지구土地를 공동관리기구에 貸與하여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자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그 구체적인 결실이 1993년 5월5-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UNDP 두만강계획관리위원회(PMC)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이다. 중, 러, 남북한, 몽골이 참

여하는 「정부간 조정 및 협의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립하고 그 산하에 실무주체로서 「두만강지역 개발회사 (TARD Co.)」를 두되 각국이 골고루 출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 주도하의 두만강 개발계획은 단순히 UNDP사업의 성격을 넘어서 東北亞경제협의체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협의체의 첫 사업이 두만강 삼각주 공동개발이 된 셈이다. 그것은 제2차 PMC회의 이후 토지임차문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오던 북 한이 태도를 바꾸어 중, 러와 함께 계획지구 토지를 개발회사에 임대하여 공동개발, 운영하는데 동의 함으로서 가능해졌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중국 훈춘과 선봉·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복원에 이미 동의한 바 있듯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발표와 동시 이 지역의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어떤 방식이건 두만강의 出海通航權의 확보에 필사적이었다. 북한이 UNDP안을 따라오지 않을 경우 러시아 하고든 한국, 일본 누구하고든 두만강 하구를 뚫고 말겠다는 기세였다. 일찌기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여 UNDP를 끌어 들인 것도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한반도를 한데 그 묶어 배후지인 길림성과 흑룡강성 그리고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장차 21세기에 새로이 떠오를지 모를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사전 布石을 겸한 전략일 수도 있다. 당장 UNDP 개발계획의 배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백텔사(건축건설회사)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중국은 UNDP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훈춘 개발과 더불어 두만강 하류 15km의 준설에 의한 국제하천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案은 준설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준설하더라도 겨우 3천톤정도의 선박이 항해할 수 밖에 없어 관계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UNDP의 초기보고서에서 예시한 향후 20년간 3백억달러의 투자소요액이란 바로 이 중국안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반면 북한은 3차 PMC회의 전까지만해도 UNDP 사업의 주무대로서 선봉, 나진, 청진을 주축으로 하는 環狀개발계획을 들고 나왔다. 순경제적으로만 따질 경우 북한의 제안이 중국안 보다는 타당성이 훨씬 높으나 어느 나라도 선뜻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던차 중국과 러시아 두나라가 쌍무적으로 앞서 소개한 훈춘-크라스키노를 연결하는 자루비노 항구사용권이 확보된 상황하에서 그리고 핵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입장에서 북한은 더 이상 이렇다할 카드가 남아 있지 않다. 그 결과가 다름아닌 3차 PMC 평양회의에서의 일대 타협이다. 앞서 말한 바 있는 공동개발회사에 관련국 토지를 공동으로 대여하고 공동개발, 운영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 합의안의 실현을 위해 일본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남북한, 몽골 5개국이 UNDP의 주재하에 정부간 조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동조성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계획기간 역시 당초의 20년에서 아마도 10년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리하여 중국 주도의 쌍무적인 두만강 유역 항구 개발과 더불어 UNDP 두만강 개발 사업은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국경지역에 21세기 극동의 홍콩,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의 터전을 적극적으로 건설할 전망이다.

Ⅳ. 北韓의 對外경제개방 전략

북한은 중국의 꾸준한 설득으로 1984년 合營法을 제정하여 외국 자본과 기술도입을 나름대로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성과는 재일 조총련계와 중, 러, 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한 70여건의 투자유치 실적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명실공히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대외개방정책과 경제개혁정책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력갱생 원칙과 주체사상만으로는 더 이상의 경제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깥문을 닫아 놓고 아무리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 보았자 그 결과는 오히려 총체적 불신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우리식대로 살자'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성과로 인해 '중국 다음의 지상낙원'이라는 구호마저 등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실상은 脫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조류와 경제주의의 등장, 경제지역주의의 팽배 현상을 외면할 수 없도록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동구권과의 경제교류 부진은 연 3년째의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했고 이제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서방 모든 나라와의 경제교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정경일체의 외교전략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했다.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對일본, 對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대외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선행하지 않는 한 그 본격적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의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됐다. 그보다 앞서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UNDP 회의 석상에서 일반의 예상을 깨고 북측대표가 두만강개발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섰다. 그해 말엔 선봉(웅기), 나진, 청진의 "白山經濟貿易地帶"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UNDP 두만강개발계획 일환으로 북한이 이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다자간 또는 단독으로 한국기업의 참여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1991년 12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일본의 中日 東北開發協會 訪北團이 조사 발표한 종합보고서 내용과 1992년 4월27일 부터 8일간 평양 및 선봉 지역에서 개최된 東北亞 경제협력 국제세미나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두만강 개발구상은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은 전장 405km의 북방 環狀 철도망을 전철화 및 복선화하는 동시에 전장 306km의 環狀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특히 나진-훈춘간 80km와 나진-핫산간 18km를 직통고속도로로 건설할 계획이다. 청진항의 연간 하역규모를 2천만톤으로, 나진항의 규모를 3천만톤으로 확장하고, 선봉에 인접한 西湖浦에 5천만톤 규모의 新雄象港을 신설하고, 무역전시장과 국제공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지역의 인구는 현재 15만명 수준이나 일단 50만명 규모의 도시로 확장하고 다음 단계로 1백만명 규모까지 확장할 구상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지난 1992년 10월 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상설회의 결정 제 17, 18, 19호로써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대외에 공표하였다. 1992년 11월 12-14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차 동북아포럼에 참석한 북측대표단(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및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남남협력연구소)에 의하면 그중 외국인 「투자법」 제5조, 「합작법」 제5조, 그리고 「외국인 기업법」 제6조의 '공화국 영역밖의 조선동포'의 범주에 한국의 기업과 개인이 포함되며 독자적인 기업투자활동을 보장한다는 해석이다. 그 후속법 조치로서 1993년 1월 공표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골자로서 예를 들어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와 투자문제」를 보면, ① 자유로운 투자 및 안전한 기업활동 보장, ② 100% 소유 허용, 시장수요에 따른 가격 결정, 수출위주 경제활동, ③ 개인단독, 합영, 합작기업 형태의 자유로운 선택, ④ 토지사용권의 50년간 소유 허용, 토지사용권의 양도 허용, 기간 연장 가능, ⑤ 어떠한 국유화 조치도 배제하고 이윤활동의 보장을 담고 있다. 심지어 나진항에 도착하는 외국 기업인에게 상륙비자의 현장발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다.

실제 동회의에 참석한 북한대표는 우선 시급하다면서 나진에 골조만 짓다가 중단된 150실 규모의 호텔완성을 위해 한국기업의 단독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 교섭은 한국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북쪽에 제의해도 좋고 제3국 기업명의도 괜찮다는 입장이었다. 다른한편 북한 당국자들은 1992년말이후 계속하여 한국 기업들에게 두만강 개발계획을 비롯 선진-나진 자유지역에 직접투자할 것을 진지하게 권유한 바 있다. 이미 발표된 대외경제관계법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거의 중국의 그것에 못지 않게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 외국의 자본, 기술도입에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93년 5월 제3차 두만강 PMC 회의에 참가한 한국대표에게 김일성 주석의 메시지라면서 북한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하여는 전용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당국자가 전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김일성의 상중임에도 김정일은 한국 기업을 특별히 배려하는 듯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북한의 대외경제 교류 및 對한국과의 경제협력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정경분리의 원칙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에 있어 필요없이 정치, 군사적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UNDP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 어떤 경우든 자국의 영토를 공동기구에 위탁하여 관리하지 않겠다던 당초의 입장을 3차회의(1993.5)에서 급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이같이 두만강 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그와 더불어 금강산지구등의 개방에 있어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는 듯하다. 즉, 지역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실험적으로 對外開放을 추진함으로서 김일성 부자의 체제에 영향을 최소화 하며, 한국을 초청함으로써만이 서방세계 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는 점이다. 그러나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국내 經濟改革은 중국의 천안문 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體制守護 관점에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다자간 협력부터 시작하며 雙務間 合作프로젝트라도 자기네가 지역적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만 나라안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두만강개발계획 참여라든지, 선봉, 나진항의 개방의지, 그리고 南北韓간의 제한적인 交流, 合作 추진 등의 사례에서 보듯, 체제유지에 걸그러운 시장경제체제의 국내 도입은 뒤로 미루고, 대외개방만은 특정지역에 한해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서서히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 같다. 이로 미루어 實利가 있는 각종 多者間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북한의 참여는 거의 확실하다. 시베리아 공동개발, 두만강 프로젝트, 금강산 공동개발, 黃海 大陸棚의 공동개발, 中國 동해안과 韓半島 서해안의 합작투자, 환경보전문제 등은 북한이 참여할 名分과 實利가 모두 갖춰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교류 합작이 多者間 협력으로부터 심화될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1991년 12월의 南北合意書 체결 이후 두 정부간에 각종 경제교류 움직임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지만 核問題등 政治的, 軍事的 이유로 인해 언제든지 留保, 延期, 取消될 개연성이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만약 다자간 협력방식이 성공하여 남북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될 경우 그것이 쌍무간 그리고 북한내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로까지 크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 대륙과 러시아 연해주 및 시베리아의 개발프로젝트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하는 과제는 그것이 多者間 방식이건 雙務的 방식이건 그 실현 가능성이 이제 아주 커지고 있다. 이점에 있어 韓中 수교는 비단 두나라간의 교류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東北亞 협력, 적게는 南北韓의 交流 촉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바 적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북한은 약 75억달러의 대외채무를 지고 있고, 舊소련연방의 해체에 따른 경

제원조의 중단과 경화결제의 요구로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다. 이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이 선봉-나진지구를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 수립이 성사되는 경우 받아낼 배상금(약 60억 달러로 추정)과 한국과의 쌍무적인 경제협력방식, 그리고 UNDP를 통한 다자간 협력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여 개발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의 의도가 성공을 거둔다면 선봉지구의 개발 소요자금은 의외로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對日수교 및 경제협력문제, 그리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는 동북아 정치, 경제질서의 형성과 밀접한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만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을 포함한 민족공동의 문제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경쟁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對日 경제접근을 서두르는 경우 결국 북한 경제는 일본에 대한 종속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먼저 추진되거나 또는 UNDP의 다자간 경제협력방식을 통한 선봉지구 및 기타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민족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선봉지구의 개발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북한의 선봉지구 개발구상은 중국의 훈춘 특구 및 두만강 개발계획을 겨냥한 대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합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광역개발의 개념에서 볼 때, 선봉지구 개발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은 중국측의 개발계획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비롯 외국 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먼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면, 이는 중국측이 두만강을 통한 동해로의 출해권을 회복하고 두만강 하구를 중국측의 편의대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적인 숙원사업과 경합관계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북한은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에서 적지 않은 외교적 갈등과 마찰에 직면할 소지가 없지 않다. 향후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韓日 간의 두만강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매우 주목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진-선봉지구 개발문제를 포함한 대외 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남북한은 민족의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높은 차원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보조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경제협력의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다자간 협력의 틀 속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북한이 1992년 11월 재개된 日本과의 수교회담에서 예상을 뒤엎고 정치문제를 이유로 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사례등으로 비추어 볼 때 북측이 '자존심'에 아주 예민하며, 다른한편 미국측과 먼저 수교한 다음 일본과 회담하려함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이 절대적이다. 북한을 다자간 또는 쌍무간 경제협력의 장으로 끌어 내려면 극도로 민감한 북측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을 뜻한다. 그런 다음에 북측으로 하여금 대외개방과 대외협력을 촉진시켜 스스로 개혁, 개방케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남북간의 통일도 북한경제가 일정수준까지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차 우리의 통일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V. 東北亞 경제권과 한반도 통일 전망

20세기를 마감하면서 地球村은 바야흐로 國際 秩序 재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세계 지도상에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나타내던 붉은색, 푸른색의 표시가 사라지고 美, 蘇를 주축으로 하던 兩極 체제 역시 무너졌다.

그 대신 國利民福을 앞세운 經濟(覇權)주의와 地域統合 추세가 새 질서 형성의 基本 틀을 짜내고 있다. 우선 GATT의 여덟번째 規律 조정을 위한 UR협상은 西方强大國들간의 힘겨루기로 그 양상이 자못 流動的인 가운데 장차 群小국가들의 경제력 신장에 外壓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른한편, 地經學的인 면에서는 北美대륙이 NAFTA 로 통합되고 유럽에 EEA라는 새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바야흐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남미 대륙 역시 地域經濟 통합의 기운에 휩싸여 있다. 그중에서도 韓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가장 크게 激動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韓·中 修交에 이은 양국 頂上회담, 아키히도 일본왕의 중국

방문, 경제의 資本主義化를 선언한 中國의 '14기 全大'와 革命 제1세대의 대폭적인 退場, 金日成 사망과 金正日로의 권력이동,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訪中과 訪韓, 韓日 정상회담, 북한 核문제의 국제 문제화 등 이 모두가 최근 2년 사이에 일어난 역사상 예측할 수 없던 大이벤트들이다.

이같은 經濟가 主가 되고 政治가 從이 되는 新데탕트 추세와 地域주의적 짝짓기의 무드에 편승하여 東北亞지역에서도 각종 형태의 經濟圈구상이 이름을 달리하여 이곳 저곳에서 점차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국가들이 장차 취할 수 있는 일종의 自救策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北美자유무역지대로 대표되는 AMEXICANA나 유럽대륙의 경제 大聯合은 동북아국가들에 있어서 확실히 새 국제경제질서 형성과 자유무역주의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大義 아래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총리는 1991년 3월 「東아시아 경제그룹(EAEG)」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기존의 ASEAN 6개국과 남북한, 일본, 중국, 인도차이나반도 4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대한 구상이다. 이 구상은 APEC(亞·太경제협의체)를 통하여 동북아시아를 포함 太平洋지역경제를 계속 관장하려는 미국의 利害와 엇갈려 시작부터 좌절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다만 非公式的이긴 하지만 중국, 일본 등이 최근 조심스레 내놓고 있는 東北亞 경제권 또는 環日本海 경제권 구상은 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을 原點으로 일단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점차 관련국들간에 협의체 형식으로 발전될 추세이다. UNDP의 豆滿江개발계획은 地經濟學的으로 韓반도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단상태의 南北韓이 동시에 招致되고 있다. 그 실현성 여부를 떠나 이같은 움직임과 변화는 韓반도의 命運에 장차 중요한 정치경제적 의미를 함축한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東北亞정세의 未來를 전망해 보면 정치적으로 중국이라는 새로이 떠오르는 강대국에 의해 동북아 지역에 日本에 버금가는 또하나의 覇權주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韓中 수교와 多者間 협력을 통해 北韓에 개혁·개방의 바람을 불어 넣어 한반도에 和平의 기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분명 금세기의 밝은 기회적 요소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본격화될 中國 및 러시아 지역과의 교류가 우리에게 최소한 經濟면에

있어서는 '威脅'임과 동시에 '機會'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값싼 저질 농산물의 홍수사태라든지 국제시장에서의 中國 제품에 의한 추월사태는 분명 위험요소이다. 반면, 斜陽산업인 노동집약적 수출기업의 진출이라든지 資源開發輸入 또는 合作에 의한 제3국 시장개척 가능성 등은 확실히 기회의 요소이다.

이처럼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이 일고 있는 脫이데올로기적 合從, 連衡의 움직임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共存共榮의 계기가 되느냐 또는 긴장과 相爭의 시작이 되느냐는 아무래도 각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판단과 신중한 국가경영의 策略여하에 달려 있다하겠다.

이 때 제기되는 문제가 여하히 북한을 多者間 경제협력의 場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여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開放을 유도할 것이냐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어느 特定국가에 의한 경제적 패권행사를 여하히 최소화하면서 남북한 공히 민족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할 것이냐이다.

중국은 이런 저런 이유로 북한당국에 대해 중국을 본받아 市場경제원리에 입각한 經濟改革과 對外開放政策을 취할 것을 꾸준히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天安門 사태를 他山之石으로 삼는 북한으로서는 이같은 충고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김일성의 사망과 정치 외교 군사 및 경제면의 국제적 고립으로 마땅한 代案이 없다. 북한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북한 체제에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내의 대외개방은 불가피하다.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원대한 구상에 우리의 資本力과 기술수준이 어떻게 제몫을 주도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4천여년의 東北아시아 관계사에 있어 모처럼 맞이한 우리의 이나마의 우월적인 지위를 얼마만큼 오래 지탱하면서 그 에네르기를 남북간의 평화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 민족 내부의 역량과 結集力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주의의 부활에 못지 않게 급격하게 신장하는 중국의 국력 상승의 틈바구니에서 지정학적으로 大陸과 大洋을 잇고 있는 한반도 특유의 橋樑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國益 增進에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는 범상히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東北亞 질서 형성에 있어 協力과 警戒를 적절히 구사하는 주체적 외교전략과 더

불어,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하루 빨리 하나가 되는 민족 내부의 통일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內燃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앞으로 21세기 동북아경제권형성을 내다봄에 있어 남북한이 우선 서로 이롭고 동질적인 것부터 취하고, 서로 해롭고 같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며, 한민족공동체로서 서로 평등하고 이익되게 공동발전하며, 자발적인 결합과 다변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남북통일의 실현시기가 더욱 단축될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현단계에서 우리나라가 東北亞地域經濟協力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프로젝트별 타당성 여부가 첫째의 가치판단 기준이 되어야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관계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관련당사국들이 동북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과거 日帝하의 大東亞共榮圈과 같은 일본주도의 日本海經濟圈운동을 해석함에 있어 혹시 재현할지 모를 경제적 패권주의를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이같은 엄청난 과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 그 원동력은 민족적 역량의 결집에서부터 찾을 수 밖에 없다. 남과 북이 따로 있고, 과거와 미래가 따로 노는 解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분단 48년을 돌이켜 볼 때 그동안 치열한 남북대결과 상쟁으로 인해 한민족의 동질성에 얼마나 많은 훼손을 감수하였으며, 북녘땅 너머 故土의 같은 민족을 얼마나 오랫토록 소홀했는가 부터 반성함으로 서만이 민족 저력의 복원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4월 중순 北韓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들린 윌리엄 테일러 美國 전략문제연구소 副所長은 의미심장한 警句를 남기고 갔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羅津-先鋒지구의 자유무역지대화등 豆滿江개발계획은 물론, 지금 북한에는 중국, 일본, 독일 지역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은 合營法을 능가하는 對外개방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과 미국이 마지막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요지이다.

6공화국 이후 우리나라는 그동안 요란한 北方進出의 광파레에도 불구하고 93년말 현재 中國 진출 해외기업의 단 0.5%에 불과하는 저조한 投資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脫이데올로기 데탕트 추세에 따라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우리의 북녘땅마저 核문제와 김일성 사망의 조문 문제로 南北韓간에 때아닌 冷戰氣流가 형성돼 있다. 이는 核문제가 남북문제의 주된 變數이냐, 아니면 民族문제의 從屬변수이냐라는 우리측 立場이 채 整理되지 않은데 기인한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對決局面으로 놓아둔 채, 북 核문제도 美國이 해결하고, 팀스프리트 再開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문제, 아파치 헬리콥터 문제 등 모두가 美側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형상이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라는 화해단계를 왔다갔다 하는 어쭙잖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統一 노력은 남북간의 '신뢰'회복에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군사적인 잇슈로 인해 남북간의 對立이 尖銳할수록, 과거 대만과 중국의 경우처럼 정치論理와 경제論理는 더욱 정교히 구분하여 다룰 수 있어야 한다. 信賴회복의 지름길은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6공 정부는 1988년 7월7일, 남북간 交易의 문호를 상호개방하고 民族內部間 交易을 대외에 선언한 것이다. 대단히 획기적이고 前向的인 것이었다. 그에 따라 연이은 남북高位級회담의 결과 1991년 12월13일 마침내 역사적인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基本합의서"가 채택되었다. 92년 9월엔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발표되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었던 터이다. 이 合意書대로만 행해진다면 한 때 우리는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꿈에도 소원하는 南北統一을 기대할 수 있었다.

세계 열강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는 틈바구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南北韓의 신뢰 구축문제는 거의 失踪돼가고 있다. 특히 南側은 列强들의 설쳐댐에 떠밀려 북한이 가지고 있는 良質의 노동력과 豆滿江 지역의 地經學的 중요성, 그리고 북한의 국지적인 對外開放 조치를 獨自的으로 평가 활용할 수도 없게 됐다.

장차 핵문제라는 태풍이 지나고 나면 列强들의 對北 경제진출은 럿쉬를 이룰 것이 예상된다. 이미 中國은 延邊의 동포기업들을 앞세워 나진, 선봉, 청진 개발에 깊숙히 파고 들었고 日本 역시 북한과의 修交와 동시 5-60억불의 배상금을 미끼로 북한에 진출할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 놓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뜨

거운 核문제를 피해가는 민간레벨의 經濟交流사업을 이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核문제의 중요성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核문제하고는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민간기업 차원의 경제교류 사안에 대해서 까지 한사코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같은 論理로 北의 人權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같이 核과 人權문제가 중요할수록 이와는 별도로 경제교류를 허용해 상호 신뢰관계를 쌓아감으로써 마침내 核 및 人權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긴 眼目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북한을 多者間 프로젝트 또는 쌍무간 海外 경제협력의 장으로 끌어 내는 일이라든지, 민간수준의 합작투자 추진 및 교류확대는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 목적에 이익이 되는 한 막을 성질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 봉제 산업이 북측과 손잡을 경우 우리에게 이익이 더 많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對外개방과 對外교류를 촉진시켜 스스로 개혁, 개방케 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보아 더 經濟的이다. 남북간의 궁극적인 통일성취도 一定水準 북한경제가 발전되도록 유도한 다음 장차 國民的 통일 費用을 줄여 가는 방향이어야 바람직하다. 그래서 남북간 信賴회복을 기하는데 필수적인 實事求是적인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緊要한 것이다.

引用 및 參考 文獻

金成勳, 東北亞경제권과 통일한국, 역사비평(26호) 1994. 가을호

金時中,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 KIEP, 1994.6

金益洙, 對內外 與件변화와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 KIEP, 1992.12

———, 中國의 공업발전 戰略과 産業政策, KIEP, 1993.5

金益洙 外, 豆滿江地域開發事業에 관한 硏究, KIEP, 1994.5

金弘錫・金美淑, 中國의 對西方 외자도입 현황과 문제점, KIEP, 1990.9

白權鎬, 投資事例로 본 對中國 투자전략, KIEP, 1992.12

徐錫興, 1978년 이후의 中國私營經濟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4.2

이문봉, 동남아 화교기업, 도서출판 길벗, 94.

趙顯埈, 中國의 建設業현황과 進出可能性, KIEP, 1993.12

崔炳主, 中國을 넘어야 한국이 산다. 한국경제신문사, 1994

대한상공회의소, 中國 주요 經濟指標, 서울, 1994

산업연구원, 21세기 世界市場 경영전략, 서울, 1994

한국무역협회, 중국투자, 이점에 유의하라, 서울, 1994

Arne J. De Keijzer, *China*, Business Strategies for the 90's, Packfic View Press, Berkeley, 994

中島嶺雄, 中國 (日), 中央公論社, 東京, 1992

什芳和, 붉은 資本主義, 中國 (日), 東洋經濟新報社, 東京, 1993

長谷川慶太郎 外, 解體하는 中國 (日), 東洋經濟新報社, 東京, 1993

宇野正美, 1994年, 日本은 中國으로 간다. (日), 學習硏究社, 東京, 1993